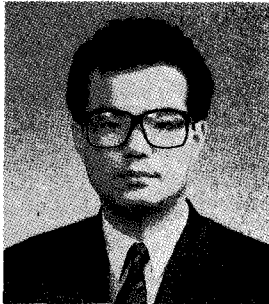


농가들은 소사육을 투기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최준호

농민신문 취재국 경제팀 기자

농가는 소사육 사업을 투기적인 사업으로 접근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값이 좋으면 빚을 내서라도 소입식을 늘리고 떨어지면 무조건 내다파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경영보다는 축산업을 평생사업으로 생각하고 품질의 고급화, 위생수준의 고도화등 기술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소값이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하고 있다.

최근 산지 소값은 한우수소 5백kg 한마리에 평균 2백58만9천원선으로 지난 1월 3백23만7천원선 대비 4개월만에 무려 64만8천원 이상 폭락해 생산비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같은 소값 폭락세는 그동안의 소값 강세에 따른 소사육 열기고조등으로 지난 3월 1일 현재 국내 한육우 사육마리수가 2백63만5천마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때의 2백37만2천마리보다 11.1%, 지난해 12월보다 1.6% 각각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80년대 중반 한우과동 때는 한육우 출하체중이 평균 4백kg 안팎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백50kg을 넘어서고 있고 장기비육을 한 소는 7백kg을 웃도는 경우도 많아 출하체중이 증가한 만큼 공급량도 크게 늘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3월 1일 현재 임신한 암소는 1백26만4천여마리로 지난해 같은 때의 1백12만5천마리에 비해 무려 12.4% 증가했다. 큰소 및 송아지의 암소값도 수소값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는 상당기간 송아지 생산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소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0년대 중반 소값과동 때도 한우 암소값이 수소값을 앞질렀었다.

여기에 소값 추가하락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최근 다투어 소를 시장에 내다파는 방매현상(放賣現狀)이 두드러지고 있고 일부 상인들은 농민들의 이같은 불안심리를 악용, 저가구매를 노리는 등 가격농

간까지 일삼고 있다.

또 일부 젓소사육 농민들은 최근 분유체화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올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교적 산유량이 떨어지는 젓소 도태를 서두르고 있어 소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지경인데도 당국은 지난 4월초까지 수입 쇠고기의 방출값을 지난해말 1kg당 평균 7천원선보다 1천6백원 낮은 5천4백원선에 하루 평균 3백50여t 씩 계속 방출, 소사육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소값 하락에 일조를 담당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엿친데 덮친격으로 국제곡물값 폭등은 국내 배합사료값을 자극, 사료생산업체들은 농가공급 사료값을 지난해 두번에 걸쳐 11.6% 인상한데 이어 올 4월에는 무려 11.5%나 올랐다.

국내 배합사료 시장규모가 연간 3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사료값 인상(약 23%)으로 양축농민들이 떠안아야 할 추가부담은 약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사육농민들의 부담도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국은 그러나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부업축산농가에만 적용하고 있을뿐 전업축산농가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업화, 규모화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축산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등으로 올해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오는 7월부터 수입진공포장 냉장육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되고 내년 7월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 부산물 등 쇠고기 대체 축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소값 폭락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미 3월말 현재 수입쇠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1.7%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17만4천여t에 이를 것으로 축산유통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쿼터량 14만7천t보다 2만7천여t이 많은 것이며 지난해 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지난 80년대의 소값과동조점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심할 경우 국내 소산업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아닌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맞고 있다.

우선 소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의 방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방출량을 하루평균 3백50여t에서 1백50여t으로 축소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출값을 올리지 않는 한 효과는 미지수일 것 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하는 축산 전문가들은 없다.

이와함께 폭락세인 산지 소값이 소비자값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산지 소값은 폭락하는데 소비자값은 갈수록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국내산 쇠고기 구매를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우 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 농민들로 하여금 계획출하를 유도하고 각종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업체들이 수입분유 대신 국산분유를 사용토록 해 분유체화에 따른 젓소도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될 수 없도록 해야하고 등급별, 부위별 차등가격제도를 정착시켜 고기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아래 흔들리지 않는 축산경영을 이루는 것이다.

농가는 소사육 사업을 투기적인 사업으로 접근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값이 좋으면 빚을 내서라도 소입식을 늘리고 떨어지면 무조건 내다파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경영보다는 축산업을 평생사업으로 생각하고 품질의 고급화, 위생수준의 고도화등 기술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관련기관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무조건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늘리기에 앞서 국내 소값에 미치는 영향등을 먼저 고려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옥수수등 농후사료의 수입 의존도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농장 개발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료수급 정책수립에도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